

기획



누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가

대한민국의
정치성 논쟁



민주공화국을 배반한 우파

홍 세 화

홍세화 _ 『한겨레신문』 기획위원,
hongsh@hani.co.kr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규정이다. 그러나 알고 있을 뿐, 민주공화국의 참된 구성원은 드물다. 역대 지배 세력인 우파가 민주공화국을 스스로 배반하면서 지배 이데올로기인 극우 반공주의와 경제지상주의로 사회구성원들도 민주공화국을 배반하는 의식을 갖도록 도모해왔기 때문이다.

최근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청산법 제정에 반대하기 위해 국가 정체성을 문제 삼고 나왔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 청산이 국가정체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조선, 동아와 같은 수구 신문들은 이런 적반하장을 이끌어내고 여론화한다.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 배치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반민특위의 실패 등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자는 당연한 요구, 즉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하자는 당연한 요구에 바로 나라의 정체성을 끌어들이 반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이 일어나는 것은 한나라당과 조선, 동아에게 나라

의 정체성은 헌법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반공’ ‘안보’ 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 나라의 정체성인 민주공화국은 ‘반공’과 ‘안보’에 의해 배반당해 왔다. 마치 자유가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요건이 아닌, 그들이 ‘공산세계’로부터 지킨다고 주장하는 ‘자유세계’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의 ‘자유’를 말할 뿐인 것과 같다.

사회구성원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가 배반당해 왔듯이 나라의 정체성인 민주공화국은 ‘반공’과 ‘안보’에 의해 배반당해 왔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의 운명은 극우 반공주의가 정치적 헤게모니를 상실해가는 오늘날에도 별로 바뀌지 않고 있다. ‘반공’과 ‘안보’ 대신 들어선 ‘시장’에 의해 같은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주주의’가 독재에 의해 철저히 유린돼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 반사 때문에 절차적 민주화를 이룬 것에 일정 정도 만족하면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일면 구체적인 듯하지만 그 한계가 불분명한 이중성을 갖는다. 쉽게 규정할 수 있는 조건들에 의해 민주주의가 성립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구체적이지만, 민주주의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한계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민주주의의 경계는 우리가 다가갈수록 저 멀리 물러선다. 가령 ‘민주화된 시대’와 ‘노동자의 분신’은 모순이라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의 목소리이다. 즉 민주주의는 하나의 체제이나 결코 만족될 수 없는 지평인 것이다. 토크빌의 유명한 명제를 다시 끌어들인다면, 민주주의는 하나의 사회상태이며 정치체제로서 ‘평등’에 의해, 즉 모든 구성원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과 정치권력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이처럼 평등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지평은 지난 2세기 동안 끊임없이 넓혀져 왔다. 프랑스대혁명 당시 민주주의를 정치적 자유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점에 한정했다면, 19세기의 민주주의는 사회적 문제, 특히 노동문제의 제기과 함께 새로운 차이를 획득하였다.

좌우 개념을 떠나 대한민국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민주공화국이다. 그렇다면,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인 대한민국 국민은 좌우를 넘어 공교육과정을 통하여 민주적 시민의식을 형성해야 하며 공공성의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 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정체성은 민주주의의 지평을 끊임없이 확대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의 의식과 정치사회 제도 속에 공공성을 확충해나가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그리고 이를 위한 기본 요건으로서의 공공성,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함의하는 바다. 문제는 민주주의를 유린하던 권위주의 독재정권이 공공성을 배반해왔음은 물론이거니와, 이른바 절차적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는 오늘의 집권세력인 시장주의 우파 또한 공공성을 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Res Publica-Republic

일반적으로 근대 공화국에 대한 개념규정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공익을 목표로 하는 사회로서, 법의 권위가 지배하는 국가”를 뜻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공화국’을 통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다. 바로 지배형태, 권력구조로서의 제도라는 것뿐이다. 그래서 대통령을 뽑기 때문에, 심지어 체육관에서 뽑아도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으로 “공화국은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 때문에 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해온 기간에도 우리는 공화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토론도 하지 않았고 질문도 던지지 않았다. 우리사회에서 공공성이 실종된 이유다. 그리고 이 실종이 국가보안법의 극우 반공주의와 결합되어 공공성 요구를 좌파적 발상,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하게 된 것이다.

가령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확충 요구를 좌파적,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라의 정체성으로 규정한 공공성이 실종되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집권해 온 반공주의 우파가 민주주의와 함께 공공성을 배반해 왔다면, 오늘 집권하고 있는 시장주의 우파는 반공주의 우파가 닦

이놓은 터전 위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공공성을 배반하고 있다. 시장주의 우파가 극우반공주의 대신 받아들인,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는 공공성 요구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지혜는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 조상은 '홍익인간'이라는 바람직한 인간주체의 상을 후손에게 남겼다. 넓게 이롭게 하는 인간, 이것이 우리의 표상이다. 마찬가지로 고대 그리스·로마 사람들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제시했던 것 중 하나가 'res publica' (공적인 일)이다. 이 'res publica'가 바탕이 되어 제도화된 것이 우리도 갖고 있는 'republic' (공화국)이다. 근대화 요구 속에서 서구에 대한 학습에 무척 열심이었던 우리가 'republic'의 어원에 대해 따져 묻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희한한 일 중 하나인데, 우리는 조상이 남겨준 홍익인간을 바탕으로 정치제도화하지 못한 채 이를 상실했고, 고대 그리스·로마시대부터 갖고 있던 공공성의 덕목에 바탕을 둔 '공화국제도'를 차용했다. 문제는 권력구조로서의 공화국만 안고 있을 뿐, 그것을 낳은 공공성의 덕목을 상실해 버렸다는 점이다. 오늘날 사회구성원들은 사익 추구에 매몰되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 매진하면서 사회구성원 간 연대의식의 가능성을 막아버렸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왜 처음부터 공공성의 덕목을 상실했을까. 그것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청산 문제와 관련된다. 다 알고 있듯이 우리는 일제 부역 세력을 청산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 진실에 지나지 않는다. 총체적 진실은 일제 부역 세력, 즉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게 아니라, 반민족세력이 민족세력을 청산했고 그들이 '민주공화국'의 실질적인 지배세력이 되었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민주주의가 배반당할 수밖에 없었듯이, 공공성 역시 배반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일제 부역 세력이란 철저히 사적인 안위와 영달을 위해 민족을 배반한 세력이다. 사익 추구 세력이 공공성을 출발 정신으로 하는 나라의 지배세력

이 되었다고 할 때, 우리는 역사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정도가 아니라 옷을 완전히 뒤집어 입었던 것이다.

나라의 'res publica' (공적인 일)은 어떤 것들인가. 정치 경제 법조 교육 언론 치안 국방들이다. 공공성을 담보해야 되는 이 모든 부분이 온통 res privata(사적인 일)로 변질되었다. 나라의 공적 부분들이 온통 사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장으로 변질된 것이다. 예컨대 정당을 공당(公黨)이라고 부른다. 공익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당은 거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꾼들의 이합집산의 장으로서 공당이 아닌 사당(私黨)이었다. 마찬가지로 공익성,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는 공교육(公教育)의 장도 일찍부터 시장과 자본이 침투한 사적 이익 창출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사교육이 창궐되기 이전부터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사립학교들이 우후죽순처럼 자리 잡았다. 공교육이 일찍부터 훼손된 것이다. 언론을 가리켜 공기(公器), 즉 공적 그릇이라고 부른다.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방송과 신문은 권위주의 독재정권의 하수인이나 나팔수 노릇을 해왔으며, 권위주의 정권이 몰려간 뒤엔 물신주의에 더욱 포섭되는 사회구성원들을 길러내는 한편으로, 조중동 같은 거대신문들은 공적 그릇이어야 하는 신문을 그들이 누리고 있는 신문 권력과 족벌자본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기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공공성은 배반된 채 국민에게서도 버림받아 설 자리를 잃었다. 공공성이란 이른바 필수 '공익' 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제도에서 보듯이 노동자들의 공공성 요구를 적반하장 식으로 탄압하기 위해 동원되는 것으로만 그 의미를 가질 뿐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공공성 요구를 색깔론으로 막아왔던 것은 그만큼 이 사회에서 공공성이 얼마나 배반되고 있는가를 반영한다.

국가보안법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감옥에 가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문 게 아니다. 가령 어느 텔레비전 토론에서 어떤 시청자는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있다고 해도 나에게는 아무런 일이 없

거든요.” 과연 그럴까. 가령 무상교육, 무상의료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사회도 여지 없는 20:80의 사회라고 할 때, 80%에 이르는 사람들에게겐 무상교육, 무상의료가 자신을 위하는 제도임에도 그것에 이끌리는 커녕 스스로 거부하도록 만든 의식이 바로 국가보안법이 요구했던 바다. 사람들을 가두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을 반신불수로 만드는 것이 국가보안법의 궁극적인 목표였다. 안보, 질서, 반공이테올로기로 무장시킴으로써 자신의 존재가 요구하는 공공성을, 그것이 바로 나라의 정체성의 발현임에도 스스로 거부하도록 하는 의식을 심어준 것이 국가보안법이었던 것이다.

절차적 민주화 시대의 집권세력인 시장주의 우파는 국가보안법에 반대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시장주의 우파도 제도에는 반대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형성한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을 이용하고 있다.

배반의 과정

잘 알려졌다시피 좌우라는 말은 프랑스 혁명 초기에 입헌군주제를 주장하여 루이16세에게 거부권을 인정하자는 세력이 의회의 오른쪽에 모였고 왕의 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세력이 왼쪽에 모였던 일에서 비롯되었다.

우파란 기존 체제와 질서 또는 전통과 관습 속에 있는 긍정적 가치의 유지, 보존을 택하고 좌파는 변화를 모색하는 세력이다. 쉽게 말해 보수란 오늘이 좋은 세력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오늘처럼 지속되기를 바라는 세력이고, 진보란 내일이 좋은 세력으로서 오늘을 바꾸려고 하는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제가 좋았던 세력을 수구라고 한다면, 한나라당은 어제가 좋았던 수구이며, 열린우리당은 오늘이 좋은 보수이고, 민주노동당은 내일이 좋은 진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보수든 진보든, 또 좌든 우든 나라의 정체성인 민주주의와 공공

성에는 동의해야 마땅하다. 민주주의와 공공성은 상대방의 존재를 존중하면서 토론하면서 경쟁하는 관계 설정의 기본 전제인 것이다. 그러나 반공주의 우파든 시장주의 우파든 공공성을 배반하면서 공공성의 요구를 사회주의적 요구, 좌파적 요구로 바라본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극우 세력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강조하고 관철하려는 정치세력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에서도 극우 세력이 성조기를 흔들어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 행위 자체가 극우의 정체성을 스스로 배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바로 극우 세력이 성조기를 흔들어댄다. 다른 날도 아닌, 일제 강점에 맞서 자주 독립을 외쳤던 날을 기념하는 삼일절에 미국의 깃발을 흔들어댄다.

보수는 보수할 가치를 전제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보수 세력이 보수해왔고 보수할 가치란 어떤 것인가.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보수했고 보수한다고 강조하지만, 지금껏 자유민주주의를 보수한다고 자처한 사람 중에서 자유나 민주를 위해서 눈물 한 방울 흘린 사람을 찾기 어렵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결국 '자유'와 '민주'라는 말로 포장된 권위주의의 국가체제인데, 그 체제는 그들의 사적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체제일 뿐이다. 한국의 자칭 보수 세력은 보수할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사적 이익을 보수, 확대하려는 세력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우파는 흔히 민족의 이익을 강조한다. 좌파는 계급적 이익을 강조한다. 그런데 한국에선 우파라고 주장하는 세력의 뿌리가 반민족 세력이다. 그렇다면 일제 부역에 뿌리를 두었던, 분단 상황을 타고 친일에서 친미로 돌아섰던 세력이 어떻게 민족세력인양 호도될 수 있었던가. 가령 조선, 동아와 같은 반민족 행위를 저지른 신문들을 교과서에까지 '민족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수 있었을까. 본디 우파는 민족지향이고 좌파는 계급지향인데, 분단 상황에서 “‘북’은 ‘좌’로, ‘남’은 ‘우’로” 간단히 구분되면서 남한의 자칭 보수 세력이 ‘우파’라는 고리를 통하여 ‘민족 세력’을 참칭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물론 극우 세력은 스스로 극우라 칭하지 않는다. 보수를 참칭해왔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자라고 자랑해왔다. 극우 세력의 혐오-배제의 논리는 한국에서 극우 반공주의와 패권적 지역주의로 나타났다. 극우 반공주의가 '좌파 딱지 붙이기'를 통해 혐오, 배제의 논리를 관철시키는 것이라면, 패권적 지역주의는 나와 다른 지역이라는 다름의 관계를 적대적 우열 관계로 환치시켜 다른 지역출신을 '묻지 마!' 식으로 혐오하고 배제하는 것이다. 한국의 극우 세력은 냉전 상황에 편승하여 이승만 정권 이래 반 세기 동안 극우 반공주의와 패권적 지역주의로 합리적 토론을 거부해왔고, 독재권력-정경유착-권언유착 등을 통해 사회 각 부문에서 힘의 논리를 관철시킴으로써 강고한 수구기득권 세력이 되었다.

이 극우 반공주의체제는 냉전이데올로기를 기본 바탕으로 하면서 사회구성원들의 의식 변화에 따라 그 효과가 약화되는 만큼 패권적 지역주의로 채워온 과정을 보여준다.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까지는 주로 국가보안법으로 상징되는 색깔론이 사익 추구 우파 세력의 중요한 방패이며 무기였다면, 전, 노 이후의 사익 추구 우파 세력은 색깔론을 무기로 사용하는 동시에 영남의 지역적 패권주의로 채워왔다. 즉 사익 추구 우파 세력은 지역패권주의와 색깔론을 보완하는 무기로 하면서 공공성을 배반해왔던 것이다.

반공주의에서 시장주의로 - 우리의 왜곡된 자화상

근래 우리는 반공주의 우파와 시장주의 우파 사이의 핑퐁게임을 종종 목격한다. 반공주의 우파가 새로 집권한 시장주의 우파에게 좌경 딱지붙이기를 하면 여기에 시장주의 우파가 반응하는 것이다. 이 핑퐁게임은 항상 그들 사이에 '사회악'이라고 합의된 '좌경'이나 사회주의를 매개로 공공성을 능멸하는 구도를 갖는다. 가령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국가정체성 문제 제기도 현 집권 세력에 대한 좌파 딱지 붙이기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데,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박세일 의원도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반민주, 반

시장, 반민족 세력이며, 좌파 정부”라고 규정한 바 있다. 하긴 극우, 수구 세력에게 시장주의 우파가 좌파로 보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황당한 핑퐁게임이 색깔론에 물든 사회적 토대 위에서 공공성을 배반하는 기제로 계속 활용된다는 점이다.

김대중 정부 이래 가장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 게 ‘시장경제’라는 것이다. 이 화두는 인간의 탐욕을 정당화하는 신자유주의와 결합되어 사회구성원들에게 자본주의적 심성을 부추기는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어서 ‘개혁’을 내건 노무현 정권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노 정권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2만불 시대’의 구호에서 보듯이 결국 박정희의 경제지상주의와 만나고 있다.

우리는 공공성을 덕목으로 갖고 있지 못하며 인류의 역사 발전 과정에서 발전시킨 사회적 가치 중에 공유하고 있는 게 거의 없다. 자유, 평등, 인권, 연대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민주공화국의 틀 안에서 공유하고 있는가? 아니다. 우리는 그보다는 경쟁의식과 질서의식을 갖고 있을 뿐이다. 사회구성원들에게 자유, 평등, 연대, 인권 의식, 평화와 공공성 의식을 갖도록 해야 할 교육과정과 대중매체가 경쟁의식과 질서의식, 그리고 물신 숭배의식을 형성해 왔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교육과정과 대중매체는 나라의 정체성으로 규정한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을 길러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배반하거나 부정하는 의식을 가진 구성원을 길러내고 있다. 시장주의에 매몰된 현 집권 세력에게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대할 수 없다.

스피노자도 지적했듯이 사람은 한번 형성된 의식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구성원들은 자신을 배반하는 의식조차 무지와 헤게모니 작동에 의해 고집한다. 그 위에 이젠 시장전체주의의 하수인이 되기를 요구받고 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놓쳐버린 것일까. 우파의 ‘공공성 배반’이라는 꽃놀이패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좌파가 찾아오기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에. ~~필요~~